

소수자 보호정책과 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Minority Protect Policies and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정석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Seok-Hwan Jung(shjung2015@pcu.ac.kr)

요약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높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분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 | 소수자정책 | 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 | 민간협동형 지원모형 |

Abstract

This study made fundamental approaches on the significance of social enterprises on minority protec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offered discussion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greatly affect minority policies. Study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greatest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are economic activities and a sense of social differences and social enterprises are a policy which can resolve these problems in the most effective way. Second, existing social enterprises were excessively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were support models which lacked creativity and develop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a lesson was learned that these must change into policy models with local coproduction. Third, a lesson was learned that social enterprises offer more than simple economic activity, offering the proper functions of society, culture, living, and language, and thus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certain sectors. Such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enterprises as minority policies.

■ keyword : | Minority Policies | Social Enterprises | North Korean Defectors | Private Cooperation Support Model |

I. 연구목적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2015년 4월 약 28,000명이 국내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정부의 소수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필요한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소수자 정책은 다른 소수자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 [1][8][11][20-23][25].

첫째, 대한민국에서 무력으로 대치중인 적대국에서 이탈한 주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현실이다. 둘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경험한 이질성으로 정착하는데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 경제시스템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작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감, 대인관계, 취업 등의 문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22][25]. 특히,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므로 사회적관계로 형성되는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사회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25].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소수자 정책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22].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립·자활을 원칙으로 하여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들은 소수자 정책이 갖는 개인의 특수성을 감안

하지 않고 획일적 형태의 정책이 제공됨에 따라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8][11][20][21][23].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3][11][21][25],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문제 [1][2][10][12][17][22][2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7],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5][6]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책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과성(policy effectiveness)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 속에서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수자정책에 가장 현실적 접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원정책이라는 광의적 개념이 아닌 정책수단의 하나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현실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 연구문제 3. 소수자 정책으로써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엇인가?

II. 북한이탈주민의 정책현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의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소수자 보호정책의 한 부분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19].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정착지원의 원칙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인도주의와 인권보호의 문제로서 국가의 의무이자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전원 수용이 원칙이다. 둘째는 국가 선진화의 과제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키며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는 통일준비 차원의 접근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적응과정 및 남북주민 간 융합을 원칙으로 한다 [23].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원칙은 ‘인류애’, ‘가족애’, ‘동포애’ 등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다른 소수자 정책들보다 상당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신변안전에서부터 거주지 확보를 통한 안전문제,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 교육, 경제지원,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소수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양한 사회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수준

이 연구의 주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사회적기업의 연계성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지원정책의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경제적 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정화를 통한 사회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시도하므로 정착초기에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스스로의 사회정착능력의 향상에 정책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원활동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다[8].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정착금에서 출발한다. 1인 세대 기준으로 700만원이 지급되며, 장

려금, 가산금을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음으로 주거에 관한 부문이 지원된다. 임대아파트가 제공되며,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의 지속성 차원에서 취업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취업 관련 정책은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 기타 등이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의 지원정책이 실제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3][10]. 특히, 주목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수준은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적응에 대한 의지결여도 작용한다. 즉, 적극적 사회정착의지 결여와 다양한 사회적 편견과의 어려움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이 어려운 것이다[9]. 따라서 1조원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적응이 경제활동의 저하로 이어지고, 경제활동의 저하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은 정부정책의 불만과 더 많은 혜택의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접근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성

적응(adaptation)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과정이다[17].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정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집단 이주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진 집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변화와 가치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20][22].

둘째는 난민이주의 특성을 가진다. 난민이주는 개인적 차원에서 전쟁과 기근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생존을 위해 탈출을 시도한다[26]. 북한이탈주민들도 탈북과정에서 난민이주과정의 특성을 비슷하게 경험하게 되고, 정착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여, 직업선택, 죄책감, 문화적응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12].

셋째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편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해 죄책감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10][20][22][23][25]. 즉, 이러한 특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큰 심리적 특성은 극도의 안전욕구를 갈망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에서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전 과정에서 경험한 신변위험과 입국 후 생활적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들이 자기보호 본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이기적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적자유와 권리는 매우 중요하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3].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빠른 자본주의 사회로의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높은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한국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과 임금 등을 원하지만 현실과의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삶의 안정성 결여 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

1.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 선행되어야 할 부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이다. 경제활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정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9].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취업문제에서 시작한다[2][3][7][16][21].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찾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된다. 첫째는 북한과 한국의 사회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원에 의한 경쟁에 익숙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이다. 북한은 폐쇄주의 국가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전반적인 사회수준(교육, 자본주의 문화, IT기술, 생활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이직률도 평균적으로 3~4년 동안 평균 3개 이상의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어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기간 소요, 전문성 비체고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규학교, 검정고시,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요리학원, 어학원, 취미관련의 교육 등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2].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경쟁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주자들에 대한 본래 국가의 국민들은 이주자들을 노

동시장에서 이주자들을 경쟁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9].

표 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수준

지표	2011	2012	2013	2014
경제활동참가율	56.5	54.1	56.9	56.6
고용률	49.7	50	51.4	53.1
실업률	12.1	7.5	9.7	6.2

(단위: %)

자료출처: <http://www.unikorea.go.kr>

다음의 [표 1]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데이터이다.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모델이 바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원정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인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최적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사회서비스의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통일부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이라는 법령을 통해 정책의 지원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2010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2013년 이후 ‘통

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정책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수익-지속가능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정책의 효과성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5][6][8][23].

표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5]

2013년 6월 기준

구분	기업명	업종	선정
1	우드림썬브라인드	블라인드 제조	2011년
2	수진어패럴	남성복(봉제)	2011년
3	향기로운 외식세상	외식업	2011년
4	엔케이이씨티	유통업	2011년
5	비바트랜스	포장이사	2011년
6	남북통일예술인협회	문화공연	2011년
7	FNK 미디어센터	영상, 출판	2011년
8	대왕버섯영농조합법인	임산물(버섯)	2011년
9	아리랑패션	여성의류(봉제)	2011년
10	에덴데코	샘플북	2011년
11	굿인	페배터리재생	2011년
12	평양통일예술단	문화공연	2011년
13	해피트리	빵, 과자류 제조, 작품재배, 교육지원	2012년
14	초코비	초콜릿/ 브라우니 제조/ 판매	2012년
15	떡마당	떡 가공	2012년
16	인성피앤씨	인쇄, 출판	2012년
17	진성메디	복지옹구 및 재활운동기구제조	2012년
18	원테크놀로지	자동차오디오 및 블랙박스 제조	2012년
19	하얀세상	청소용역	2012년
20	에스이앤티소프트	IT(소프트웨어테스팅)	2012년
21	정민서	김치제조	2012년
22	백년기업	싱크대	2012년
23	북한이탈주민장애인 자활공동체	발전기	2012년
24	백록담	떡가공	2012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수가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한다는 사실이다[5].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다.

이렇게 고용불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회

적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외면받는 정책이 되었다. 또한 지원에 대부분이 고용지원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술이전과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진출을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적 현실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통한 포용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성을 높여 지원주의 정책이 감소되고, 정부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이러한 시스템구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포용정책은 장기적으로 정책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3. 정책의 발전

기본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정착과정은 입국 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합동정보심문과정을 거치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일정한 교육을 거치거나, 각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나서 기초적인 보조금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원예산의 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책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정부주도형 지원정책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유연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형 사회적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 가지는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사회적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적기업이 확장된 민간협동형 정책지원모형의 개발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IV.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가

장 어려운 점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적응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경쟁으로 바탕으로 하는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소수자정책의 하나로써 일정기간의 보호를 통해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가 사회적기업이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각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도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기업 참여를 일정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경제활동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사회·문화·생활·문화 등에 사회적활동을 함께 하면서 적응하는데는 사회적기업만한 정책이 없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적응교육이고, 자립, 자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주도형 시행해온 사회적기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민관협동형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인력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등은 민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도 좋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형으로 가지만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여 수익창출형의 사회적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양질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운영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그 한계를 벗어나 실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혼합형의 제3섹터 형식의 사회적기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창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3권, pp.262-290, 2010.

[2] 강창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pp.51-63, 2011.

[3] 김강녕, “대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1호, pp.23-60, 2012.

[4] 김성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310-321, 2012.

[5] 김현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 통일부, 2014.

[6] 문준우, “사회적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 안암법학, 제45권, pp.157-197, 2015.

[7] 박정란, 강동완, “새터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pp.45-68, 2008.

[8] 서윤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제2호, pp.265-286, 2004.

[9] 손애리, 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pp.5-32, 2012.

[10] 유병선,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과제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pp.41-50, 2011.

[11]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민관 협력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24권, pp.65-100, 2002.

[12] 이기영, “소수자로서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 제9권, 제2호, pp.157-198, 2005.

[13] 이용재, 김봉환,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

호, pp.227-235, 2013.

[14] 이주현, 김민지, 박현준, 유시은, 노진원, “북한이탈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건강증진생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60-167, 2015.

[15] 전영평, 장임숙, “소수자로서의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주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39-268, 2008.

[16] 전영환,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권, pp.259-295, 2007.

[17]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pp.215-248, 2013.

[18] 조동운, 전병화, “북한이탈주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369-389, 2013.

[19] 주은주, 오정수,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적지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pp.95-128, 2011.

[20]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편과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호, 제2권, pp.101-126, 2003.

[21] 최락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자 주거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19-146, 2006.

[21] 최윤희, 김수연,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5권, 제3호, pp.187-219, 2013.

[22] 최정진,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21권, pp.107-123, 2012.

[2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014.

[24]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

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1호, pp.125-141, 2009.

[25]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Vol.46, No.1, pp.5-68.

[26] J. Perace,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03.

[27] C. Majorie and L. Virginia, “Aging and Social Care. In Robert H. Binstock & Etael Shar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1985.

[28] Social Enterprise Coalition, “There’s More to Business Than You Think: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London: Social Enterprise Colition, 2003.

저 자 소 개

정 석 환(Seok-Hwan Jung)

정회원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2015년 3월 : 배재대학교 서재필 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지심리학, 시스템다이내믹스